<10.16873/tkl.2016. 72. 41>
한국문학논총 제72집(2016. 4) 41~73쪽

월남전 휴(종)전의 정치경제적 심상*

김 주 현**

차 례

1. 다시 읽는 휴전론
2. 월남재건 참여론의 양가성
3. 선택/배제되는 동남아시아 표상
4. 포스트 파월론=승공(勝共) 성장
5. 종전, 재현의 모멘텀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월남 휴(종)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정치경제적 심상을 크게 세 방향에서 분석했다. 월남전 휴전 협상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한반도 휴전을 월남 휴전의 '부정적' 모델로 삼은 한국 정부는 휴전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휴전론이 가시화되면서 휴전은 경제적 관점에서 모순적으로 상상되었다. 최초의 '휴전=월남 특수 종료'라는 시각에 반해 전후재건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로서 휴전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각은 '메콩종합개발계획'으로 집약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월남이 패망하자 싱겁게 종결된다.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7065)
** 인제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휴전론은 또한 1960년대 후반 인력 수출 장소로 떠오른 동남아 표상에 선택적으로 관여했다.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립주의에 관계없이 월남전에 휘말린 위험 지역으로, 친서방 국가는 낙후됐으나 개발 가능성이 무궁한 자원의 보고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월남전을 중심으로 동남아를 가르고 묶는 발상이며, 현재의 동남아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월남 패망을 안보의 반면교사로 전유하여 월남전 종결을 승공(勝共) 성장론으로 재빨리 종합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공식적 파월 담론에 도전하는 지식 사회의 '비판적' 개입은 드물었고, 방법적으로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지만, 시기와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70년대에 발표된 월남전 소설 텍스트는 휴(종)전론의 파장을 월남전 재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베트남 휴(종)전, 메콩종합개발계획, 포스트 파월론,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표상, 승공 성장, 배트남전 재현

1. 다시 읽는 휴전론

베트남전쟁사에서 1968년은 반전 운동이 세계를 휩쓴 가운데 월맹과 미국이 최초로 평화협상에 나선 분수령이지만 한국의 파월 전쟁사에서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68혁명이 가까운 일본에까지 파급되고도 한국의 대학생, 지식인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병한 베트남 참전국이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짚어볼 여지가 있다. 여야 합의로 '최초의 해외 진출'을 승인한 파병 결정에 다수의 지

식인이 동조 혹은 침묵했던 상황에서 '호, 호, 호치민'을 외치는 구미, 일본의 반전 시위에 한국 지식인이 끼어들 자리는 협소했다. 그러니 월남전을 축으로 한국의 1968년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파월 자료를 보아도 눈부신 승전 통계와 사진이 이 시기 한국군의 활약을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은 실감이 느껴지는 용어가 아니었다. 1968년 이전까지 휴전은, 월남에 주둔해 있던 한국군의 규모와 활약으로 보건대 월남전을 규정하는 표현-'전선 없는 전쟁'이 환기하듯이, 30년을 끌어온 지루한 전쟁에 동반될 법한 전쟁 피로감 또는 전쟁의 참상에서 비롯된 바람으로 소개되었다. 68년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섣부르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논조가 지배적이지만 엄밀히 말해 휴전은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과 미·월남·월맹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었다. 물론 휴전이 된다면 한국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워낙 '특수'한 전쟁이 계속되면서 간간이 휴전설이 돌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전쟁은 확대되었고 한국군은 꾸준히 증파했다. 이 때문인지 1973년 1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국 매체에서는 베트콩에게 휴전이란 곧 '전쟁의 연속'이라는 반어법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 월남전 휴전은 무엇보다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월 공동운명체론, 이른바 '자유 수호'대신 '전쟁 경제'론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려진 대로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와 달러 획득은 참전의 주된 대가였다. 반공이 참전 기간 내내 용맹한 한국군의 승전담으로 재현되었다면 달러 획득은 그에 따르는 국가적 이익이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반전 여론에 못이긴 '제스처' 같았던 휴전론이 본격적인 휴전 회담으로 이어지며 전쟁의 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국내 참전 담론은 어떻게 굴절/변화했을까. 이 질문에는 참전에 별다른 의식이 없었다는 당대 지식인들의 고백[1]에서 받은 자극과

1) 임재경, 「회고록(8)-기자생활에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녹색평론』 143,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밝힌, 한국전쟁과 달리 '돈이 되는 전쟁'으로서 한국의 베트남전쟁이라는 문제의식이 결합돼 있다.[2] 구체적으로 참전 후 4년 여, 지식인과 국가가 공조해 만들어낸 반공 민족주의적 파월 담론이 휴전 협상을 맞아 눈앞에 펼쳐진 아시아민족주의의 승리를 안보 위기론으로 전유하며 강력한 포스트(post) 파월론을 출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미리 밝히건대 그 논리는 정부의 논리이되, 참전에 동조했던 지식인들에게 내면화된 냉전 이데올로기, 그로써 드러난 이들의 세계사적 안목과 종종 겹쳐진다.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간의 월남전 연구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월남전의 경제 효과'를 참전기 국민총생산, 수출액 얼마라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참전기로 돌아가 그 '경이적'인 통계를 실시간으로 접했던 지식인의 관점에서, 월남전 경제 효과의 정치적 내포-세계사적 냉전 약화, 공존 화해 무드를 오히려 내부의 반공 개발론으로 변용, 심화시킨 정권의 포스트 파월론을 수용함으로써 고착된 월남(전) 이미지의 문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민주화 투쟁이 번번이 공안사건에 엮인 것을 생각해도 월남전 휴전은 70년대 반

2015.7, 193쪽. "그걸 '베트남 특수'라고 그랬지요. (…)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달성했다고 자축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면만 고려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 측면을 봐야 하는 기자들조차도 외화벌이의 반대 측면, 즉 전혀 명분 없는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 잃고 팔다리 잘려나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2) 김주현, 「파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현대문학의연구』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본고는 이 논문의 4장(휴전 협상과 '기회'로서의 전쟁)을 확대 연구했다.
또 오늘날 월남전의 공식 명칭은 '베트남전쟁'이지만 필자는 논문의 주제에 따라 월남전, 베트남전쟁을 달리 사용한다. 한국군이 참전 중이던 6,70년대 당대인의 담론, 시각,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 월남전을 사용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쟁을 택했다.

공 국가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결절점이나 현재까지 월남전 연구는 관련 문학 텍스트 연구, 정치・역사학계의 냉전 담론, 필드 연구에 집중돼 있다.[3] 70년대의 '자명'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잊힌' 전쟁인 월남전 종전의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시사받은 선험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2차 텍스트인 문학 작품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담론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므로 월남전 같은 특정 소재를 다룬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해당 소재의 당대적 함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월남전 문학 연구가 인물의 전쟁관, 서술 태도의 통시적 변화 등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경사된 것도 이러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탓이 크기에 이는 문학 연구를 위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월남전 문학 텍스트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며, 문학 텍스트는 직접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다. 주요 텍스트는 1960년대 말부터 75년 경까지 지식 사회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널리 읽힌 잡지『사상계』,『세대』,『신동아』 등의 월남전 관련 논고와 신문 기사 중 휴(종)전과 관련한 기사들이다.

2. 월남재건 참여론의 양가성

1985년『무기의 그늘』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비로소 되돌아보게 된 '한국의 월남전'은 달러가 지배하고 달러를 추구했던 추악한 전쟁이었다.

3) 월남전 관련 연구로 서은주,「한국소설 속의 월남전」,『역사비평』통권32, 역사문제연구소, 1995; 고명철,「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현대소설연구』19, 현대소설학회, 2003; 신형기,「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동방학지』157, 동방학회, 2012 참고. 사학계 연구로는 권헌익,『학살, 그 이후』, 유강은 역, 아카이브, 2012; 윤충로,『베트남 전쟁의 한국사회사』, 푸른역사, 2015; 김정배,「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 체제」,『미국사연구』38, 한국미국사학회, 2013;「베트남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 체제」,『역사와경계』80, 부산경남사학회, 2011 참고.

80년대 사회과학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해도 『무기의 그늘』이 폭로한 월남전은 종전까지 지속됐다가 급속하게 잊힌 '따이한 넘버원' 신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월남전이 무엇보다 '쩐'의 전쟁이었음을 재확인시켰다. 그런데 따져보면 '한국의 월남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은 1960년대 후반 공공연히 논의된 '용사들의 피값'에 이어져있다. 운 나쁘게 뽑혀 정글에 떨어지고, 전투 끝에 사망한 무명 장병들의 '피값'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파병=해외 진출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열을 주입했던 국민국가의 책무로도 간주되었다. 이 때 정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무명용사'를 대변(해야)할 강력한 주체일 수 있었으나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택한 포지션은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적=베트콩에 두고 죽음의 의미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무기의 그늘』이 안영규라는 '개인'의 위치에서 타락한 전장을 응시한 것은 80년대 국가 권력이 본질적으로 70년대를 계승한 군사 정권임을 의식한 불신 선언이었다. 국가를 군대식으로 운영하여 벌어들인 달러가 없었다면 80년대의 개발 독재 또한 없다는 인식이다. 다만 휴전 협상 즈음의 피값 요구가 당시로서는 '정당'한 민족주의적 셈법으로 간주되었다면, 『무기의 그늘』은 불의한 정부를 텍스트에서 지움으로써 참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묻는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정말 무엇을 위해 싸웠던가.

월남전에서 한국군의 전투 행위는 군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론'을 해외에서 확장/실험해간 성격이 짙었다. 반공, 근대화, 주체성은 군사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의론의 핵심 항목이었고, 전장의 한국군은 동일한 덕목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한국군 관할 부락 내에서 이를 관철했다.[4] 이 모든 행동의 근저에 '월남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고, 1968년 휴전 회담 즈음에도 친정부 매체를 통해 동일한 논리가 제출되었다. 주의할 것은 이 때 휴전이 상상되는 방식이다. 휴전은 전쟁 종결로 가는

4) 월남에서 한국군이 구사한 민족주의적 전시 작전 행위 대해서는 김주현, 앞의 논문 참조.

‘전투 행위의 중지’이나 미・소의 정치적 결정이므로 한국 전쟁처럼 분단이 고착되리란 추측[5] 아래 정부 형태는 어렴풋이 월남 내 연립정부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선을 앞두고 열세에 몰렸던 존슨 행정부의 발언에서 시사 받은 상상이었기에 미국 정세가 어떻든 한국은 휴전 협정에 낙관적이지 않았다.[6] 허나 ‘제2의 한국전쟁’으로서 월남 휴전=한국식 휴전=종전이 한 덩어리로 사고되었기에 노골적인 글이든 완곡한 표현이든, 미국이 월맹의 작전에 말리거나 미국 내 반전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수단의 전투인 휴전회담”을 의도대로 이끌려면 한국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작전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곁들여졌다. 나아가 한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7] ‘훈수’를 두어가며 휴전 협상을 지켜보는 여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월남 재건 참여의 첫째 명분은 휴전 후 월남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우방의 의무, 형제지맹(兄弟之盟)이었다. 월남을 파괴한 한국이 동시에 재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전쟁 이후 연합군의 원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해 완전한 반공 정권이 들어선 한국과, 월맹・베트콩・월남 연립 정부가 상상되는 월

---

5) 김홍철, 「월남전후처리와 우리의 문제」, 『사상계』188, 1968.12, 69-72쪽. 휴전(休戰, Cease-fire)은 종전(終戰, Cessation of War)과 다르다. 그런데 1973년 월남 휴전은 휴전이었지만 종전으로도 사고되었다. 국내에서는 휴전과 종전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언급했듯이 월남전의 선행 모델인 한국전이 휴전으로 사실상 분단 체제를 만들며 종전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사이공 함락 전까지 월남은 여전히 월맹과 베트콩의 전투 행위가 계속되는 곳이어서 휴(종)전은 월맹과 베트콩에 귀속된 매우 불안정한 용어로, 그것의 사전적 의미와 월남 상황은 표리부동했다. 정작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자 종전 대신 감정적인 용어 ‘월남 패망’이 널리 사용된다.
반면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종현은 68년부터 진행 중인 평화협상이 “전쟁의 종결 즉 ‘종전(終戰)의 실현’”이지 한국전 같은 “휴전의 실시”가 아니기에 더욱 협상이 어려우리라고 보았다. 윤종현, 「한국 휴전과 비겨 본 월남종전의 전망」, 『해군』192, 해군본부정훈감실, 1969.7, 48쪽.

6) 문희석, 「월남 휴전 협상과 한국」, 『세대』69, 1968.6, 82쪽.

7) 유경현, 「월남전후의 따이한」, 『동아일보』, 1968.10.22., 3면.

남은 엄연히 케이스가 달랐다. 경제적 관점에서 솔직한 속내는 “그나마도 休戰이 성립되고 越南에 平和 회복이 된다면 피의 대가였던 外貨의 넷트 인컴이 두절되게 마련”[8]이라는 발언에 있었다. 휴전 방식이 어떻든 미국의 영향력은 존속될 것이므로, 휴전 후의 월남은 최소한 연립 정부, 최악의 경우 좌경화된 정부로 상상되었다. 즉 협상에 의한 휴전을 상상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 휴전이 그렇듯이, 정세에 따라 휴전=종전이 아닌 불안정한 모델을 염두에 두었고,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권리 확보를 우선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연히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면서 한국군이 미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1일 1달러 몸값을 받은 데 대한 보상 심리도 개입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휴전은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한국군의 ‘조국’이 누릴 권리로 기의가 바뀌고, 월남 특수 종말은 이제 재건을 뜻하는 ‘새로운’ 기회로 반전된다.

당시 월남전의 경제 효과를 보아도 사정은 분명하다. 파월 효과는 군인의 몸값보다 부대 수출품, 파월기술자의 봉급 등이 컸고, 그 중에서도 기술자들의 월급 비중이 우세했다. 군인과 거의 동시에 들어간 파월기술자들의 ‘기술’은 초기부터 한국군의 ‘용맹’이나 ‘예의’와 다른 경제적 능력으로서 파월로 얻은 경제 효과를 선전할 표식이 되었다. 기술자들은 차출이 아니라 ‘선발’되었고, 더러 현지에서 말썽을 부려 ‘어글리 코리안’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장관 봉급’을 선회하는 임금은 너도나도 월남붐을 부추기는 데 큰몫을 차지한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한국의 대월수출이 인력 수출 내지 용역 수출에 그치리란[9] 비판적 지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파월 선발은 위험해도 돈을 버는 확실한 길이었다.[10] 파월 초기인 1966년에 있었던 사이공 파월 기술

8) 김홍철, 앞의 글, 76쪽.
9) 「대월남 경제 진출과 BA정책」, 『신동아』18, 1966.2.
10) 파월 인력은 1966년 1만 204명에서 점차 증가하다 1969년 이후 휴전론이 무르익자 동남아와 기타 지역으로 인력 수출 방향이 바뀐다.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이 40%를 상회했고, 용역군납과 건설군납으로 나뉘어 군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자 좌담회는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미국회사에 고용된 8명의 기술자들은 "한국의 '대표선수'라는 자부심"으로 테러 위험을 견디며 똘똘 뭉쳐 일한다. 한 참석자는, 특수한 사례였지만, 필리핀 기술자에 비해 300백 달러를 더 받는 한국인 기술자를 언급하며 월남 특수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월남전은 한국경제가 일어날 '기회'이며, 기술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보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11] 참전이 1960년대의 고도성장을 일으키고 유신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일반적 견해에 부합한다. 실제로 1968년의 연 평균 성장률은 11%를 상회했다.

'메콩델타종합개발계획'은 이렇게 양가적 이미지(위험/기회)로 상상된 휴전이 월남 재건참여론으로 집약되는 계기가 된다. 1968년 휴전 협상이 시작되며 공표된 '메콩델타종합개발계획'은 미·월 양국이 전후 월남 경제 부흥 개발계획을 위해 공동 작성한 '릴리엔솔' 보고서(1969)의 핵심이었다. 총 8억불을 들여 메콩강 유역에 댐을 만들고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월남 전역에서 이모작을 가능케 하려는 거대한 기획이었다. 전후복구 예산 30억불 중 가장 금액이 크고, 메콩강이 흐르는 인근 국가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덕에, 단번에 동남아 전역에 진출할 기회를 잡게 되므로 월남전에서 연간 20억불의 군수경기(軍需景氣)를 누린 일본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전혀 미개발된 채 방치되어"

1966년 기준으로 외국기업 중에서는 빈넬(Vinnel)사의 임금이 월 평균 690달러로 높았고, 한국 기업 한진이 월 300달러로 최저임금을 지불했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한국의 해외 취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187쪽.

11) 파월기술자들의 사이곤현지좌담회, 「생각던것보다는 안전한데요」, 『신동아』25, 1966.9. 좌담회는 『동아일보』 특파원 이석열 사회로, 김원재(페이지통신시설회사 전자기술자), 김을규(트란스·아시아회사 건축기사), 윤백현(트란스·아시아회사 건축설계課間), 이동화(알·엠·케이회사 電工), 이인화(페이지통신시설회사 자재 관리 담당), 최옥수(아드리언·월슨 회사 전기기사), 최근명(트란스·아시아회사 전기기사)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1966년 7월말 현재 파월 기술자는 6천 8백명에 달했다.

있는 메콩개발계획에 “대참전국”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의무”로 소개[12]된다. 월남에 이미 군소 토목, 건설 회사가 진출해 있었던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다분히 전략적 냄새가 풍기는 이 계획에 한국 정부, 기업, 언론은 무조건적 열의를 표한다. 공식적인 보고서라고는 해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전투가 계속되는 월남의 현실상, 이 거대한 계획은 먼저 미국의 계획대로 휴전이 성립되고, 그 후 미국으로부터 원조금이 들어와야 했는데, 미국이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와 언론이 나서면서 전후 복구 참여는 장밋빛으로 예측되었다. 대월 수출품의 군수품을 민수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는[13] 정부 발표는 휴전이 열어줄 ‘큰 기회’에 대한 민족적 진출을 홍보함으로써 월남 특수의 지속성을 보증했다.

이 기대는 1973년 3월, 한국군이 계획을 몇 달 앞당겨 철수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1973년 초부터 74년까지 월남 휴전 관련 기사는 거의 매일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렸다. 온도차는 있으나 철군에 따른 특집 기획을 내보내면서 전쟁의 여진이 계속되는 월남과, 월맹의 호전성을 휴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월남재건 소식을 꾸준히 내보냈다. 1973년 1월에도 전후 복구 참여 가능성을 낙관

---

12) 박안송,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 함일출판사, 1969, 222-224쪽 참고. 메콩종합개발계획은 1963년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에 의해 수립됐고, 릴리엔솔 보고서에서 구체화되었다. 릴리엔솔 보고서는 미국의 테네시 계곡개발 계획 입안자 D.E 릴리엔솔(미국자원개발회사 회장)과 월남정부경제개발담당 국무상 보·쿠옥·툭이 중심이 되어 작성했다. 주 내용은 메콩개발계획 외 월남 농업 부흥, 공업화, 연안 해운 진흥, 도로망 확충, 전력 확보안 등이다. 당시 월남은 호놀롤루 회의에서도 비슷한 전후경제개발계획안을 내었는데, 경제부흥에 10억 6천 9백만 불, 경제계획에 19억 4천만 불을 계상했으며 그 중 25억 9천 6백만 불을 외국 원조에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상 미국 원조에 달린 계획이었던 것이다.

13) 「월남휴전 뒤에 한국 경제 특혜」, 『경향신문』, 1968.11.2.1면; 「二月중 월남에 경제사절」, 『동아일보』1969.1.16.1면; 「월남재건에의 참여」, 『매일경제신문』, 1973.1.29.2면.

하는 기사가 실렸고[14], 월남 대통령 티우의 방한을 즈음한 4월에 다시 한·월간에 새로운 전후 협력 약속이 전해졌으며[15] 73년 6월에는 월남 난민을 위해 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16] 한국군은 철수했지만 미국의 전후 원조기금에 대한 정보, 일본의 복구 참여 의욕이 소개되며 월남재건사업계획의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주로 69년 릴리엔솔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고 보면, 당시 한국의 백만 달러 원조는 전후 복구 참여에 대한 노골적인 기대를 품고 건넨 한국 정부의 선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인한 특수 경기는 완전히 끝났"으며 정부의 다각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이 기술과 용역으로 참여하더라도 "국제입찰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냉철한 분석[17] 은 별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월남 재건사업은 미국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휴전 이후의 월남 상황도 예측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1974년이 되면 국내에 관련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18] 그럼에도 월남 재건 참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대는 월남이 패망한 75년까지 남아 있었다.

> '사이공'의 軍事정세가 급박해짐에 따라지난65年 국군의 越南派兵을 계기로 본격화돼 10年여를 끌어온 大越經濟協力도 멀지않아 완전히 종결될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단계에서 가장 아쉬운건 최근3년동안 6백10만달러 상당의 無償援助까지 제공하면서 방대한 규모의 越南戰後復**

14) 「정부, 월남 복구에 적극 참여」, 『동아일보』 1973.1.25.1면; 「월남 휴전 협정설과 전후 복구문제」, 『경향신문』, 1973.1.23. 2면. 「외한은 지적 "월남전후복구사업 따라 경공업 합작 필요"」, 『동아일보』 1973.6.22. 2면.

15) 「전후 새 협력 모색」, 『경향신문』, 1973.4.11. 4면.

16) 「정부 월남에 백만달러원조」, 『동아일보』, 1973.6.11.1면.

17) 「종장을 넘긴 12년의 월남전」, 『동아일보』, 1973.1.25.5면. 1968년 당시 비슷한 시각을 보이는 기사로 「단폭 뒤에 올 세계의 과제들(16)」, 『매일경제신문』, 1968.11.22. 1면.

18) 1974년 12월 16일 『매일경제』 1면에 실린 「사이곤서 개막, 한월 경제 각료 회담」도 복구참여를 논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소식만 전하고 있다.

舊計劃가운데 약 20억달어치의 工事를 따려고 추진해온 참여계획이 美國의 大越援助中斷과 군사정세의 급박으로 ①이미 오래전에 白紙로 돌아갔었다는 사실이다.[19]

인용문에서 월남의 종전은 문자 그대로 최종적으로 월남특수를 종결시키는 '한국의 경제사적 사건'이다. 인용문의 안타까운 어조가 일러주듯이, ①은 좌절된 꿈에 대한 평가일 뿐, 그것을 예측 못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망국이라는 우방의 비극 앞에서 체면도 없이 기회의 상실을 아쉬워하는 어조는 월남 특수를 향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기사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1975년 3월 26일, 다낭이 함락되고 월남 패망 위험이 보도되면서 국내에 쏟아진 관련 기사의 시의성-교민 안전 문제, 패망 원인, 현지 표정 등-을 생각할 때 이는 놀랄만한 '집념'이다. 한국군은 '철수'했지만 한국 기업과 1만이 넘는 교포가 월남에 남아 경제 활동 중이던 사정이 참작됐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한국의 '경제사적 사건'으로서 월남전 종전의 의미가 커진다. 메콩강종합개발계획을 염두에 둔 백만 달러 원조는 일종의 헤프닝이었던 것이다. 이 화려한 일장춘몽은 이른바 미국의 '명예로운 철수'에 동반된 장밋빛 후속조치였으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인용문에서 이 점이 빠진 것은 당시 전문가 집단에서도 월남전 종전 방식, 종전 이후 한월 관계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월남에서 벌어들인 600백만 달러를 3년간 월남에 무상으로 준 것이 '가장' 아쉽다는 인용문의 태도는 몰염치하나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한국군 철수 후 경제 성장률이 8%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월남전은 휴전 당시 예측했던 최악의 형태로 끝났고, 그로써 월남 특수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날아갔기 때문이다.

---

19) 김태선, 「아깝게 끊긴 輸出大魚줄」, 『동아일보』, 1975.4.26. 4면. 이밖에도 「충격 속에 막 내린 경협」(『매일경제』, 1975.5.2. 2면.)도 유사한 감상을 전한다.

3. 선택/배제되는 동남아시아 표상

앞에서 대략 밝혔거니와 월남 특수는 월남에 한정되지 않았다. 월남 특수는 월남에 인접한 동남아시아로도 확산되어 60년대 후반 매체에 소개되는 동남아 심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냉전기 우리에게 동남아시아는 실제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멀고 친근하지 않은 심상 지리에 속했다. 같은 반공 국가인 태국, 필리핀, 대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풍토병을 앓은 전쟁기의 기억과 위태롭게 중립 노선을 걷는 국가들은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가 가까운 지역, 개척 가능성의 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는 월남전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서이다.[20]

1968년 휴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월남에서 익힌 경험을 써먹을 다른 시장으로 동남아 지역이 고려되었다. 당시 동남아 몇 개국은 기후와 풍토가 월남과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처럼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월남전을 계기로 전통적인 친서방 국가인 태국, 싱가포르, 대만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 언론은 이를 '세계로 벋어나가는 한국인의 기상'이라 명명했다. 엄밀히 말해 세계란 동남아 친서방 국가에 한정되었지만 월남에서 시작된 동남아진출은 이후 중동진출을 예비하며 한국인 해외진출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실험, 수행하는 모태가 된다. 그런데 전쟁에 의해 열린 기회였기에 동남아 진출은 처음부터 기업의 독자적 사업 수

20) 이충, 「동남아로 뻗는 한국상」, 『세대』33, 1966.4, 194-196쪽. 1966년 11일(2.7-2.18)간 박정희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박정희의 순방 목표는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월남 파병을 이해시켜 아세아자체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었으나, 필자가 보기에도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 필자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3개국 시장에 한국상품 수출을 늘리고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고 순방의 의의를 말한다.

주라기보다 국가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개발국'의 계획표에 속했고, 따라서 실적이 적어도 '진출'했다는 사실 자체로 강력한 홍보 효과를 발휘했다. 동남아 공사 현장은 유신 정권의 외교와 경제 성장을 가시화하는 '시각 자료'로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동남아가 매체를 통해 가까워지자 이에 맞춘 듯이 동남아와 거리를 좁히려는 계획이 발표되고 한국이 참조할 만한 정치경제적 '가능성'의 지역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 시대에 호응하여 외교 다변화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의 산물이 아니었고, 또한 잡지나 신문을 통해 동남아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월남을 경험했거나 월남을 다녀온 이로부터 동남아를 추체험한 기술자들의 동남아 인식은 좀 더 다채로웠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동남아에는 다양한 인종, 정치 체제, 문화 풍토가 존재했고[21],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도국'이 널려 있어 한국의 미국, 일본 중심 외교관계와 협소한 국제 정치 감각을 넓힐 좋은 텍스트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고려되지 않았고, 기술자들이 있는 동남아는 '월남의 연장'으로 재현되었다. 1960년대 초중반 비동맹주의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과 특히 『세대』지에서 표한 제3세계에 대한 우호적 시각, 나아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를 끌어와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던 군사정권의 '당당'한 주체성을 생각할 때 1960년대 후반 동남아가 친월남: 친월맹이라는 대립 구도로 표상되는 데는 약간 의문이 생긴다. 최근까지도 우세했던 동남아 중립국에 대한 정치적 편견과 불안정성, 위험한 이미지는 월남전을 매개로 고착된 것이 아닐까.

이 시기 친서방 국가가 있는 동남아는 싱가포르부터 멀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까지 경제적으로 대단히 '매혹적'인 땅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수준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지만(대만) 한국이 그랬듯이 공업 입국을 표방하여 굵직한 관급 공사가 있었고, 열대우림 지역의 풍

21) 분차나 아타코르, 『지역협조를 향한 동남아현실』, 『세대』82, 1970.5 참조.

부한 산림은 자원이 적은 국가의 신흥 기업이 큰 자본이나 기술 없이도 넘볼 만한 땅이었다. 또 위험한 월남과 달리 풍토병만 극복하면 생명의 위험도 없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가 있었던 이 지역 친서방 국가의 이미지는 오랜 수카르노 체제를 끝내고 70년대 초 월남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조차 대동소이하다. 더위와 낯선 풍토, 낙후된 기반 시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일하는 배경 화면으로 조명된다. 몇 국가는 경제발전상을 탐구한다는 명목으로 신문에 취재기가 실렸음에도[22] 민족 갈등을 정책으로 다스리며 경제개발에 힘쓴다는 '성장' 정보를 전할 뿐 이렇다 할 특색이나 차이가 없다. 동남아의 친서방 국가는 한국과 비슷한 개발주의를 표명하면서도 한국의 진출을 허용한 자원의 보고일 따름이다.

그러나 라오스, 캄보디아(크메르)는 다르다. 라오스, 캄보디아는 동남아의 친서방 국가보다 자주 동향이 전해졌다. 두 국가는 비동맹 중립국 표상의 전반적 특질-정치적 불안정, 낙후된 국민 의식, 빈곤국-에 월맹과의 친연성이 더해져 대단히 불안정한 이미지가 눈에 띈다. 5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위태로운 중립국으로 표상된 라오스는 60년대 들어 "중국 본토가 공산군에 먹히고 북부 월남이 호지명에게 먹힌 이후 급작스럽게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의 하나"[23]로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국가가 되어 '평화'의 이미지가 사라진다. 이는 1967년 이후 미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월맹·베트콩의 "성역"이 됐다는 캄보디아 표상과 더불어 인니반도에서 공산 세력이 '동남아에서 횡적 범위를 넓혀 연속 관계'를 가지며 적화 욕망을 팽창시키고 있다고 요약된다.[24]

---

22) 이창열, 「동남아시아 경제 기행①~⑤」, 『동아일보』, 1964.12.1.~1964.12.26, 3, 4면. 경제학자인 필자는 대만(①~④)과 필리핀(⑤)을 다녀와 글을 실었다. 대만 경제의 발전상을 부러워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는 삼모작이 되는 자연환경을 믿고 게으른 필리피노와 부지런한 화교의 모습을 대비하여 서술했다. 필리핀 기행은 1회로 미결되었다.

23) 「멍드는 라오스의 중립」, 『사상계』 121, 1963.5, 158-161쪽.

24) 라오스, 캄보디아 동향은 잡지에서 주로 '움직이는 세계'와 같은 해외 통신란에

물론 이러한 표상의 근원에는 양국이 월남과 함께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적 공통성이 작용한다. 또 70년대 들어 양국의 중립주의가 무뎌지자 메콩개발 계획을 입안한 선진국 관료들은 메콩강이 흐르는 3개국(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을 동남아 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킬 투자처로도 파악한다.[25] 그러나 전체적으로 줄곧 '의심받는' 중립주의는 『청맥』, 『세대』지 등에서 집중 조명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민족주의에 대한 호의적 시선과 달리, 독립적인 '개별'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엮인 유사 월남, 더 정확하게는 월맹에 종속된 전쟁지역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 빈곤 탈출을 공통 목표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친서방 국가에 한정되며[26], 메콩종합개발계획이 동남아 경제동맹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70년에도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렇기에 확실한 외교 관계도 없이 메콩종합개발계획에서 이득을 보리라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유엔 특별기구의 개입을 기대하며 종전 후의 인도차이나를 '4천만의 소비자'가 있는 지역으로 바라본 개발주의의 산물이며,[27] 월남 패망과 함께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관심 밖으

서 전해졌다. 「라오스의 새로운 긴장 상태」, 『사상계』73, 1959.8; 「라오스 동란」, 『사상계』87, 1960.10 참고. 60년대 이후 라오스 관련 기사는 윤종주, 「줄타는 인지반도내의 라오스 중립」, 『사상계』112, 1962.10; 「안풀리는 라오스 문제」, 『사상계』, 1961.7; 「결단을 부르는 동남아 삼각 전란」, 『사상계』135, 1964.6; 「월남군의 라오스 진격 작전」, 『신동아』80, 1971.4 참고.

25) 유다가 구보다, 「동남아의 경제자원과 개발의 비전」, 『세대』82, 1970.5, 100-105쪽. 필자는 아시아극동경제의원회 자문관이다. 이 글은 특히 휴전 이후 미국의 안배로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로 등장하는 데 대한 우려와 민족적 반감을 일본인 필자로부터 확인시켜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26) 「아시아의 새물결①~④」, 『동아일보』, 1967.11.16.~11.30, 1,3면.

27) 유다가 구보다, 앞의 글, 101쪽. 그는 메콩개발계획이 몽상이라는 비웃음 속에서도 메콩 4개국에서 일부 계획이 실현되었다고 쓰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경제상황이 좋아질 4개국의 미래를 낙관한다. 그러나 메콩개발계획은 1996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안전기획부, 『96년도 해외산업 경제 정보』, 국가안전기획부, 1996. 199-222쪽 참고.

로 밀려난다.

한편 비교적 상황이 좋았던 1972년 8월, 월남 이외 동남아 지역에는 2,677명이 진출했다. 그 중 취업 인원은 1,908명이었다.[28] 총 취업 인원 23,142명 중 8%를 상회했으니 적은 인원이 아니지만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거나 후진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도로 공사와 벌목에 고용된 인력이었기에 한국이 참고할 근대화 모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른바 다각적 외교에 입각한 수출 시장개척이 논의되던 시기였으므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인 일부 국가(싱가포르, 태국, 대만)는 탐방의 대상이 되었고, 현지답사 기사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준 기사의 실상은, 한 태국 관료가 적절히 예측했듯이, 향후 동남아가 월남전에서 철수 준비를 시작한 미국을 대신하여 커질 경제대국 일본의 도덕적 역할과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29] 그러니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구상했다면 종전 이후 중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남아와 일본의 역할을 연구했어야 하는데, 일본 자본의 동남아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아시아에 미칠 '월남전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60년대 중반 한 기자가 만난 아시아 지식인들의 '분석'에서조차 별로 배운 것이 없다.

1967년 조세형은 아시아의 친서방 지식인들의 입을 빌어 아시아의 공통점을 반둥정신이 분해되면서 "신념외교 시대"가 사라지고 "경제에 눈을 떴다"고 진단한다. 또 이들은 "오늘의 동남아국가는 '對中共'을 통해서 피동적으로 연결되어 있"[30]으며 경제적 승리만이 중공에 대한 효과

또 캄보디아와 한국은 1970년 3월 캄보디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친미 정권이 서자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1975년 4월 월남 패망을 앞두고 단교한다.

28) 「해외 인력 진출 활발」, 『매일경제신문』, 1972.10.11. 7면. 취업 여부를 집계하지 않은 총 인력은 63,258명이며, 월남, 서독, 미주(괌), 동남아, 일본 순으로 인력이 나가 있었다.

29) 분차나 아타코르, 앞의 글, 111-113쪽.

30) 조세형, 「아시아의 미래상」, 『신동아』41, 1967.11, 74쪽. 한국일보사 편집부국장이었던 조세형이 동남아 10개국을 2달간 돌며 각국 지식인들을 만나는 '대담 여

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한다. 특히 조세형이 만난 월남 언론인 티엔은 “철저한 반골기질”을 드러내며 미국의 개입을 냉소했는데, 티엔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파월 특파원들이 월남에서 흔히 듣던 비난이었다. 전술한대로 그 시기 한국군은 최고 전투력을 자랑하며 일변 파괴하고 일변 건설하며 월남을 한국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전쟁 경제는 물자를 불더미 속에 넣고 다시 물자를 가져오게 하는 역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 전쟁에서 챙긴 경제 부흥에서 배운 바였다. 제2의 한국전쟁인 월남전이 전쟁과 재건의 역설을 시험할 곳으로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월남전에서 희생 없이 이득을 챙기고 있을 때도 한국 정부는 휴(종)전 전개 양상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월남전에 대한 발언권이 있었던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특히 많은 기자들이 참전 초기부터 주로 구미 논평을 복사, 번역해 기사를 작성했고, 휴전을 앞둔 1972년에도 키신저 보고서에 기초한 중립화 혹은 연립정부안이 정설처럼 통용되었기에[31] 휴전 이후 몇 년 이내 월남이 패망할 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종전 후 연립 정부의 성격에 따라 동남아 진출에 제약이 있으리라는 경고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32], 월남전은 참전 초기부터 동남아의 친미, 중립국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동남아 제국(諸國)에 대한 상을 편향적이고 제한적으로 고착시켰다. 비교적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한 잡지가 1973년 1월 휴전을 기념해 마련한 특집에서, 기뻐하며 철수하는 미군 사진을 싣고 이어 ‘동남아

행’ 후 집필한 책(『아시아人은 말한다』)의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대담들은 인도, 태국, 싱가포르, 월남, 필리핀, 일본 언론인과 말레이시아 역사학 교수, 싱가포르 정치연구자들 등 모두 12인이다.

31) 『신동아』 95호(1972.7) 특집 ‘월남전의 새 국면과 방향’ 아래 실린 정용석, 「전쟁 종식의 조건과 전망」, 우승용, 「월남평화 모색의 미로」, 홍승면, 「강대국 정치의 각축 속에서」 참고. 민병천, 「월남전의 특색과 한국에 대한 영향」, 『국방연구』 28,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70 참고.

32) 민병천, 앞의 글, 54-55쪽.

에 한국을 심는' 한국인 화보를 대대적으로 넣어[33] 휴전과 동남아 진출을 별개로 논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월남전이 제공한 동남아 진출을 끝낼 수 없다는 민족적 다짐을 표한 것이었다. 여기서도 휴전은 전쟁이 막고 있던 투자를 촉진시킬 계기였다.[34]

4. 포스트 파월론=승공(勝共) 성장

그러나 정작 휴전이 성립된 후 목격한 월남의 사정은 좋지 못했다. 1973년 초에 2천만 달러를 예상했던 대월 수출 전망은 3월에 불가능해졌고, 월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유류 파동에 휘말려 고전을 겪었다. 월맹과의 국지전, 전쟁 피난민, 관료의 부정부패는 전후 월남을 방문한 기자의 눈에도 전후 복구를 "먼 훗날의 과제"로 남겼는데, 그에게는 '베트콩과의 전쟁'보다 '재원의 궁핍'에서 연유하는 불안이 더 크게 보였다. 휴전 직후였으므로 이 글은 인상기에 기운 감이 있다. 그러나 휴전을 종전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끝난 전쟁 특수를 실감하는 기자의 사실적 태

33) 1970년 3월『신동아』특집 '월남전종전 그 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벌목 현장, 조미료 공장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메시지는 자명하다.

34) 좌담회, 「한국 기업 '성업'중」,『신동아』104, 1973.4. '포스트 베트남'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참석자는 고관영(미원 인도네시아 파견단장), 이정익(대림산업부사장), 정인영(현대건설사장), 정천석(고려개발사장), 최계월(남방개발사장), 이갑섭(경제평론가)이었다. 이들은 기업인답게 동남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큰 관급 공사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한다. "李: 현재 월남에서 발전소 건설이다, 송전선가설이다, 정유공장을 짓는다 하면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때까지는 무서워서 가지 않던 나라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투자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할텐데.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고 투자기관이면 투자기관에 대해서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신용을 얻고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같아요." 222쪽.

도는 한국군 철수 후 1년, 사이공 함락을 2년 남긴 시점에서 휴전이 한국에 안겨줄 이데올로기 효과를 알려준다.[35] 그 한 축은 68년부터 회자되다가 휴전 후 굳어진 포스트 파월론=승공(勝共) 성장에 이어져 있다.[36] 일부의 예언대로 휴전 후 월남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는 듯했으나, 75년 월맹이 총공세를 편 지 두 달 만에 항복한다. 월남 패망은 한국 정부, 지식인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안겨 패망 원인에 대한 진단이 오갔고, 여야 좌담회가 열렸다. 그것은 간신히 연명 중인 월남의 반공 진영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같은 분단국 처지에서 목숨을 걸고 도왔으나 패배한 자유 진영의 말로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이 따랐다. 이후 그 충격은 '월남은 졌지만 한국은 이겼다'는 테제로 정리되지만, 자유 진영 패망이라는 인식론적 충격 앞에서 월남전의 전말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작업이 없을 수 없었다.

월남은 왜 패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월남전과 한국전의 차이를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사실 이 질문은 패전 요인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나, 미국에서 공식화된 냉전적 발상(동남아 도미노 이론), 월남전=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지혜를 필요로 했다. 즉 차이가 있어도 여전히 냉전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1968년 당시에도 이미 분석은 끝나 있었다. 반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월남 민족주의는 전쟁 초기부터 한국군 지휘자와 종군기자를 놀라게

35) 이시헌, 「전후의 뒤안 휴전①~⑤」, 『동아일보』, 1974.3.18.-3.25, 3, 4면 참조.
36) 1960년대에 승공(勝共)은 근대화로 공산주의를 이기자는 내부 단결의 의미가 컸으나 70년대에는 "생산력은 물론이고 생산관계 면에서도 북한보다 우월함을 증명한다는 체제 대결"로 의미가 커지는데,(이하나, 「유신 체제 성립가 '반공' 논리의 변화와 냉전의 감각」, 『역사문제연구』32, 역사문제연구소, 2014.10, 524쪽.) 그러한 징조를 60년대 후반부터 볼 수 있다. 68년 이후 미·월간 휴전 회담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정부는 휴전 논의가 구체화되자 반공 경제 성장론을 들고 나온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글로 문희석, 「월남휴전협상과 한국」, 『세대』 1968.6; 김명회, 「월남협상과 종전후의 귀결점」, 『세대』72, 1969.7 참조. 이는 친정부적이었던 『세대』지의 특징이기도 하다.

했고,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대학원 교수 김영준은 월남전이 '동서냉전의 집결체'지만 미국의 잘못된 전략과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지 않은 월남민중의 태도 때문에 미국이 한국형 휴전을 시도하려해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후 그 이유를 밝힌다. 남로당이 괴멸했고 중공군이 주력부대였던 한국전쟁에 비해 월남전은 민족해방전선이 실체로 존재하고, 전선 또한 명확하지 않아 휴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37] 그는 이 불분명한 전선 때문에 휴전 이후 군사적 충돌이나 협의사항을 통제할 수 없다고 예측한다. 이것이 다소 예외적인 시각이라 해도 월남전에 관한 담론 유통의 소유권을 가졌던 국방부에서 이 견해는 불유쾌한 전망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수이기는 하나 공산진영: 자유진영의 대결이란 도식 대신 외신을 인용하여 월남전이 월맹·베트콩: 월남군의 '내전'이며 전자가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38]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지식인의 전황 예측은 워싱턴의 정책을 토대로 씌어졌고, 종군기사는 한국군 전투 업적을 영웅담으로 가공, 편집했으므로 전황이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일어도 파월 기간 동안 월남전의 진실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자 '월남 패망'을 대서특필한 신문 1면 기사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공론장이나 토론회가 없었던 이유는 지식인 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논할 준비가 미흡했고, 월남 패망을 반공을 위한 반면교사로 전유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때문이었다. 월남전에 관한 공식 논평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지식인의 사정은 그 때까지 나온 특파원의 글로도 알 수 있는데, 이에 앞서 월남 패망 5일 전에 『동아일보』가 여야당 인사를 초청해 연 좌담회 풍경은 한국 정부의 못미더운 정보력

37) 김영준, 「월남전: 변모의 전망」, 『세대』, 1968.4, 175쪽.
38) 『청맥』이 외신을 인용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39, 상허학회, 2013.10 참조.

과 더불어 1975년 당시 월남전 종전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보여준다. 이 짧은 좌담회에 포스트 파월론의 모든 것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을 개최하는 등 닉슨 독트린에 반응하여 대북 정책을 "대화 있는 대결"로 변경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월남 패망은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안보 위기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39] 공화당과 유정회는 월남 패망 조짐과 휴전선 일대 땅굴 발견을 엮어 한반도를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야당 대표 정일형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은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은 티우를 교훈삼아 현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할 때라고 논평한다. 좌담회에서 사회자가 제기한 논점은 월남 패망 요인 분석, 월남과 한국의 차이, 대응법이었지만, 부패한 티우 정권을 박정권에 비견하려는 야당 대표의 공세와 이에 맞서 월남 패망을 한국의 위기로 선언한 여당 대표의 설전이 계속된다.

> (가) 鄭: … 첫째로 越南軍이 싸움한번 제대로 안해보고 10억달러어치이상의 현대식 美國장비를 버린채 中部高原지대를 철수했다는 것은바로 사기와 정신무장이 안된 국인들이 싸움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둘째로 外國군이 개입한전쟁은 위험하며 셋째로 共産主義者와의 협정약속은 무의미하고 마지막으로 長期의 부패 독재정권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티우'를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전쟁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民主化와 함께 부정부패의 일소가 긴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

39) 김정배에 따르면 1970년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은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모순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앞서 유신은 미국의 대중공 정책 변화가 초래할 정권 위기의 위험성과 남북 화해가 초래할 정권 위기 위험성에 박정희 정권이 '사적'으로 대응한 사건이다. 김정배, 「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 체제」, 『미국사연구』38, 한국미국사학회, 2013.11, 172-183쪽.

다.

(나) 朴: 남의일같지않은 越南사태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不快한 결론만 내리는지 이해할수 없어요. 40마일밖에 共産軍이 와있는데도 월남의 野黨人事 종교인학생들은 추가원조 10억달러를 '티우'한테 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물러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티우'나 '론놀'이 反共한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 자유와 민주주의 물론 좋지요. 그러나 공산당을 이기는데는 자유와민주주의가 있어야 하고 전시에도 그것이 절대 있어야한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견지한다면 정치인으로서 큰 과오를 범한다고 나는 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도 전시에는 그에 맞는 전시민주주의체제가 있는 법입니다. 공화당권 미우니 정권바꿔보자는 얘기와 객관적인 안보문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봐요.[40]

그런데 이렇듯 대립각을 세우던 두 사람은 월남과 한국의 차이점을 질문 받자 한국이 반공정신이 투철하며,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의 극동 방위권에 있어 안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심지어 박준규는 월남이 "막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1,2년은 더 견디"리라고까지 예상하는데, 3월 26일 다낭이 함락된 상황에서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발언이었다.[41] 설전이 계속되어 월남 패망을 안보 위기로 전유하려는 여당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성토하려는 야당의 동상이몽이 부딪치지만, 야당이 제기한 부정부패경계론은 월남 패망을 지켜본 인사들도 지적한 일반적인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승공 성장론에 밀리고 있었다.

또 1975년 5월 9일, 『신동아』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월남 패망의 원인이 티우(고위층)의 부정부패, 월남군의 전투의지 상실, 대미 의존적 성향에 있다고 꼽는다.[42] 좌담을 주재한 기자 역시

40) 좌담, 「여·야중진 좌담 안보를 보는 평행선 시각」, 『동아일보』, 1975.4.14.3면.

41) 패망 시기가 빨랐을 뿐,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의 회고록을 보아도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477쪽 참조) 따라서 이는 안보 위기에 따른 의도된 발언이거나 정보 수집력이 약했다는 뜻이 되는데, 어느 쪽이든 주류 매체에서 여당을 대표한 발언이므로 놀랄 만하다.

42) 좌담회, 「월남 최후의 날」, 『신동아』130, 1975.6, 좌담회는 5월 9일 열렸으며 한

월남 패망기에 사이공에서 목도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거론하며, “미국의 무기를 원조받는 것보다도 자기 체제에 대한 애착심,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이라 할까 훈련이 선행되어야 했”[43] 다고 지적한다. 정권의 부정부패 이전에 월남인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신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인용문 (가)에서 “외국군이 개입한 전쟁은 위험”하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군으로 전쟁에 개입한 한국의 파월 결정이 전혀 성찰 대상일 수 없는 까닭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이미 2년 전에 철수한 한국군은 이후의 내전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그러나 월남 패망은 유신 정권의 통치에 좋은 구실이 되었다. 정권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월남 다음은 한국”이며 “1975년이야말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의 해로 정했다”[44] 는 풍문을 이용해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재야의 반발을 안보 위기론으로 돌파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월남전은 ‘반공’ 전쟁으로 수미일관 정리되고, 다음 과제로 월남 패망에 따른 한국의 대책이 논해진다.

월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펼쳐진 이 논의는 부분적으로 월남전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관점 변화를 가져왔다.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내전’으로서 월남전이 강조되고, 강대국과 신식민주의에 맞서는 개도국의 정치적 독립 문제를 월남전쟁의 결산으로 파악[45]하거나, 미국의 참전과 전략 실패를 분석하여 파병 초기의 천편일률적인 냉전적 시각에 수정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닉슨의 이른바 ‘월남전의 월남화’ 선언 이후에 나온 변화임을 감안하면, 같

국일보 기자 양평의 사회로 김기원(전주월 대사관 공보관), 안병훈(전주월 의료원 사절단장), 이숙자(전사이곤대 문과대 대학원생), 이해욱(대림산업 전주월 사무소장), 박홍원(동아방송 해설위원, 전주월 특파원)이 참석했다.

43) 위의 글, 132쪽.

44) 이용필, 「미국의회의 세력구조와 대한정책」, 『신동아』131, 1975.7, 126쪽.

45) 김홍길,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시련」, 앞의 글. 74-75쪽. 김홍길은 냉전기 강대국들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제국면에서 개도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간접지배 형태를 신식민주의로 명한다.

은 '내전'을 겪었고, 이 경험을 살려 월남을 도운 분단국이 미국의 변심 앞에서 미국의 대한 정책을 추궁하는 태도는 한국의 월남전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다. 굳이 말한다면 이는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적 주석'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알려진 대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치명적 이익'에 속하는 지역에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판단은 자주국방론과 더불어 주로 정치학자들이 미국 외교 문서를 분석해 도출한 결론이었으므로, 해당 매체를 읽는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요점은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닉슨주의에 대한 정부와 친정부지식인들의 반감은 미국에 책임을 촉구하는 글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많은 빚을 진' 한국 분단의 주범임에도 월맹에 패했고 이제 주한 미군마저 철수시키려 하니 세간에 '미국을 믿지 말자'는 배신감이 퍼졌다며[46], 승공 성장을 통해서만 자주국방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인 사회에서 공론장이 열리지 못한 데는 이러한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월남 패망은 아시아 민족주의의 승리였다. 이제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외교 정책이 제기되었으므로 한국도 전후에 재편될 지역 체제에 끼어들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식인 사회는 필요한 포스트 담론을 만들지 못했고, 이른바 월남 전문가들이 월남의 패망 이유를 '가난', '나태', '부정부패' 등 월남인의 민족성에 두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것은 승공 성장론에 포섭되었다. 월남을 교훈삼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開途國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 보전하는 일도 '經濟力'의 획득에 있는 것이며 對內外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는 길도 '經濟力'의 愚劣정도로서 결정되는 것이고, 또 안전보장의 튼튼한 기틀도 결국은 '經濟力'에 의거하여 구축될

46) 김학준, 「미국은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 『세대』144, 1975.7. 또 『세대』143호(1975.6)에 실린 '특별기획 · 한국안보 11문 11답', '한반도와 열강' 기획은 이런 우려를 질문답변 형식에 담은 종합판이다.

수있다는 결론"[47]은 개도국 국민의 역량을 경제 성장으로 총화시킨 유신 정권의 개발 독재를 정당화한다. 물론 월남전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글도 나왔지만[48] 주지하듯이 이는 예외적인 사례였다. 대개 글들은 월남전의 유래와, 68년 이후 미국의 대월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종전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성찰의 초점도 한국의 참전 행위가 아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월남전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한 잡지사는 미국의 기밀 외교 문서를 통번역해 싣고[49], 베트콩이 주인공인 전쟁 뒷이야기를 소개하지만 그것은 이미 패망한 월남을 아쉽게 추억/회고하거나 새로운 수치와 통계로 패망을 기정사실화한 '문서들의 후일담'이었다. 따라서 이는 얼마간 월남전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이 그랬듯이, 문서가 매개하는 사유의 깊이는 대중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미 전부터 엄청난 수치와 통계로 월남전 경제효과를 학습한 대중의 감각은 이러한 역 데이터 앞에서 오히려 추상적으로 둔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결과는 파병 초기부터 파월담론의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되면서 예정된 것이었다. 즉 애초에 비판적 파월 담론이 없었으므로 성찰적인 포스트 파월론이 불가능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그 불가피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다. 월남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외교 문서 번역이나 주인공이 바뀐 전쟁 이야기는 지식인 특유의 '방법적 우회'였지만, 그다지 효용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식적인 파월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재현 차원에서 월남전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주로 애국심을 자극하는 월남전 서사와 잡지, 신문, 텔레비전을 통해 시각적으로 대중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좌담회, 소설, 르포, 영화의 대중적 재현성을 갖지 못한 학술적 방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필요한 것은 '익숙'한 방식으로

47) 위의 글, 81쪽.
48) 리영희, 「월남전쟁」, 『신동아』103, 1973.3.
49) 「인지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방위정책(자료집)」, 『세대』144, 1975.7.

'새롭게' 들려주는 월남 이야기였다.

5. 종전, 재현의 모멘텀

『동아일보』 좌담회에서 박준규가 밝힌 대로 1975년에 월남은 누가 보아도 '소멸 단계'를 밟고 있었다. 다낭 함락 후 월남의 방위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인도차이나 사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월남이 1~2년은 버티리라고 한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었다.[50] 앞에서 말했듯이 이 좌담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 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투철한 반공의식"을 월남과 한국의 차이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의한 월남의 허약한 반공의식에는 또한 참전 초기부터 꾸준히 월맹이나 베트콩을 약한 적으로 대상화해온 한국군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한국군은 처음부터 휴전에 반대하면서도 베트콩에 대해서는 철군 전까지 우월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미국에 맞서 10년간 게릴라전을 펼쳐온 베트콩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군의 전투력이 미군보다 세다고 자평했던 덕이다. 미군이 보기에도 한국군의 전투력은 놀라웠다. 한국군은 미군이 포기한 지역을 평정했고, 미군이 주둔지에 베트콩과 주민을 분리할 목적으로 세운 전략촌을 신생활촌으로 바꾸는 등 아시아인을 이용한 대민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 60년대 후반 월남전 기록물에서 베트콩이 적이되 존재감이 약화된, 추상적인 악 또는 비루하고 교활한 음모로[51] 이미지화되는 데는 이러한 자신감을 간과할 수 없다. 9

50) 좌담, 「여·야중진 좌담 안보를 보는 평행선 시각」, 『동아일보』, 1975.4.14.3면.

51) 기록물이 다 그렇지는 않다. 군인의 수기보다 한국 독자, 다시 말해 고국의 국민에게 읽힐 목적으로 특파원이 쓴 전투담은 확실히 이런 경향이 우세한데, 파급력이나 영향력에서 무시 못할 위력이 있었다. 이러한 베트콩 재현과 표상은 정글에서 벌어지는 '전근대적'인 월남전의 성격을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정글의 전투를 '베트콩 색출' 모험으로 읽게 한다.

년의 파병 기간은 베트콩을 적으로 물화하면서 자아를 부풀리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휴전기에도 지속된 베트콩에 대한 우월감과 한국군 철수 후 식어버린 무관심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한국군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월남전은 월남인의 반식민 투쟁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주도한 민족주체성론의 확실한 배움터였다. 한국은 여기에 끼어들어 월남을 '이념적'으로 선도하고 이들을 학생으로 가르치고자 했지만 타자의 땅에서 선생을 자처한 외국인으로서는 월남의 내부를 직시할 수 없었다. 선생의 눈으로 본 월남은 게으르고 태만한 낙제생(월남인)들 속에 일부 반항적인 문제아(베트콩)가 들끓는 곳이었다. 월남전 기록물에서 반복되는 '고마워하지 않는 땅', '울지 않는 월남인'이란 표현은 그 불일치가 종전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바, 비교적 정보에 밝았던 특파원은 물론이고 사정은 문인도 다르지 않았다.

1973년 3월 한국군 철수 직전 최인훈과 함께 월남에 간 고은은 "월남에 입국한 한국의 마지막 여행자일지도 모를" 그곳에서 "기이한 감동을 물리칠 수 없었다." 고은의 기이한 감동은 전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견문과 감상을 뒤섞어 체계가 없는 글을 쓸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견문 대상인 월남의 내부로부터 온다. 그는 출발 전 읽었을 월남의 식민 역사, 미국의 패배, 휴전에도 무연히 일상이 영위되는 사이공의 표정을 교차시키며 "적어도 월남이 통일될 때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으리라고 쓴다.[52] 그런대로 티우가 민심을 얻고 있고, 월맹 또한 어렵게 협정을 끌어냈지만 이제부터 베트콩이 군사 활동보다 "정치전이나 특수전"으로 나올 터이니 통일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당시에 통용되던 견해이다. 그러나 이어 고은은 호치민을 좋아하는 월남인의 의식에는 한 가족이 베트콩과 월남군으로 갈라져 전쟁 중일 때도

52) 고은, 「월남종전을 사이공에서 맞은 한 시인의 월남기행①」, 『세대』 116, 1973.3, 145쪽. 이 글은 ②회로 완결된다.

"사상, 소속을 초월해서 조상의 茶禮에 모이는"[53] 순수한 민족의식이 있다고 씀으로써 은연중에 월남전의 참상을 한국 전쟁에 겹쳐 생각한 흔적을 남긴다.

고은의 사유가 여기서 끝나므로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은의 글은 전쟁이 끝난 월남을 들여다본 참전국 지식인의 혼란을 정직하게 전해준다. 일찍이 파월 초기 특파원들이 수기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낸 월남 민족주의에 대한 무의식적 경사는 월남에서 휴전을 맞았을 한국인이 목도한 타자의 맨얼굴이다. 파월 9년은 그것을 보기에 짧지 않았지만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조차 쉽사리 이를 보려하지 않았다. 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월남이 망했을 때, 사정이 달라졌던가. 살펴본 대로 1975년은 유신 정권이 국민 총화론을 펼친 시기였다. 승공 성장론은 마을 단위의 계몽적 근대화 프로젝트-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어 새롭게 동적인 외피를 입는다. 이 국가의 모습을 병영국가[54]라 부르든, 개발독재국가라 부르든 그 중심에는 파월 체험이 있다. 파월 체험은 이미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진행된 시기에 국가가 부르면 국민이 응답한다는 선례를 만들고, 한국인의 감각을 냉전기에 고정시켰다. 바로 이 감각 앞에서 지식인은 월남 패망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길을 잃었지만, 이와 균형을 맞추듯이 70년대가 되면 개인의 파월 체험을 기존의 월남전 서사와 다르게 그려낸 작품-황석영의 소설-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추후 과제는 월남전 재현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으로서 종전 후 월남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

53) 위의 글 ②, 363쪽.

54) 한홍구,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이병천 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참조.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사상계』, 『세대』, 『신동아』,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2. 논문 및 단행본

고명철, 「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연구』19, 현대소설학회, 2003, 291-312쪽.

국가안전기획부, 『96년도 해외산업 경제 정보』, 국가안전기획부, 1996.

김정배, 「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 체제」, 『미국사연구』38, 한국미국사학회, 2013, 151-190쪽.

김주현, 「『청맥』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39, 상허학회, 2013, 295-336쪽.

김주현, 「파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현대문학의 연구』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149-182쪽.

문유미, 「한국의 월남전 참전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4.

민병천, 「월남전의 특색과 한국에 대한 영향」, 『국방연구』28,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70.

서은주, 「한국소설 속의 월남전」, 『역사비평』통권32, 역사문제연구소, 1969, 214-225쪽.

박안송,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 함일출판사, 1969.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한국의 해외 취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이병천 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이하나, 「유신 체제 성립기 '반공' 논리의 변화와 냉전의 감각」, 『역사문제연구』32, 역사문제연구소, 2014, 507-553쪽.

이상현, 「데탕트기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5

호, 한국정치학회, 2011, 193-220쪽.
윤종현, 「한국 휴전과 비겨 본 월남종전의 전망」, 『해군』192, 해군본부정훈감실, 1969.7.
윤충로, 『베트남 전쟁의 한국사회사』, 푸른역사, 2015.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데니스 워너, 『印支風雲三十年』, 백우근 역, 태양문화사, 1978.

3. 기타 자료

임재경, 「회고록(8)-기자생활에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녹색평론』143, 2015.7, 193쪽.

<Abstract>

Political and Economic Image of Cease-fire (Cessation of War) of Vietnam War

Kim, Ju-hyeon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ages of cease-fire (cessation of war) of Vietnam War affecting Korean society from 3 different aspects. While cease-fire talks on Vietnam War were initiated in 1968, the Korean government was largely negative on the talks since the cease-fire in the Korean Peninsula was a 'negative' model for Vietnam Wa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government. When the cease-fire talks became more evident, however, the cease-fire was contradictively visualiz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n the contrary to the earlier view of 'Cease-fire representing the end of special economic boom from the Vietnam War,' the cease-fire began garnering attentions as new potenti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ost-war reconstructions. These views were integrated into 'Mekong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o draw unusual interests, but it all abruptly ended when Vietnam collapsed.

The cease-fire talk also selectively engag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ich emerged as a manpower expert site in the late 1960s. Laos and Cambodia viewed as a war-infested danger zone regardless of neutralism, whereas pro-Western nations perceived the region as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with unlimited potentials despite

primitivity. It is believed that such perception not only divided the Southeast Asia based on the Vietnam War but also significantly impacted the image of the Southeast Asia.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promptly moved on to accumulate the end of Vietnam War into a growth theory by defeating communism after asserting to learn lessons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fall of Vietnam.

Throughout these series of processes, it was rare to find 'critical' interventions from the intellectual society challenging the expedition of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although it was methodologically insufficient to draw public interest, the social text on the Vietnam War published in the 1970s can be deemed to accept the aftermath of cease-fire talk as new momentum of the Representation of Vietnam War when judging it based on the time and its contents.

Key Words : Cease-fire(Cessation of War) of Vietnam War, Mekong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Post Vietnam troop dispatch discourse, the fall of Vietnam, Laos and Cambodia's Representation, a growth theory by defeating communism, Representation of Vietnam War.

▌논문접수 : 2016년 3월 10일
▌심사완료 : 2016년 4월 16일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